

#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428
----------	-----

제출연월일 : 2009. 1. 1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개정이유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변경함(안 제2조).
- 나.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을 정함(안 제6조).
- 다. 변상금의 사전 징수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8. 12. 19. ~ 2009. 1. 4.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의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산정기준은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과 같다. 다만, 영 별표 3 제2호가목·나목, 제4호가목·나목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점용료등(“점용료등”이란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 사용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허가년도의 경우는 허가를 하는 때
2.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개시 후 3개월 이내

제4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점용료등은 영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 4회 균등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2의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에 따라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점용 목적을 80퍼센트 이상 상실한 경우 : 전액 면제

2. 하천점용 목적을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80 감경
3. 하천점용 목적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상실한 경우 : 100분의 50 감경

제7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 징수 통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 또는 사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제8조(허가 수수료) 「하천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자치구청장에게 사무 위임된 경우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하천관리사업소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0조(징수교부금)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징수교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만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2. 점용허가업무 및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 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2. 선박 등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국가하천 : 월액 20,000원 2) 지방하천 : 월액 10,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 5톤 이하 유선 <table><tr><td>지역등급</td><td>동 력 선</td><td>무동력선</td></tr><tr><td>국가하천</td><td>월 100,000원</td><td>월 50,000원</td></tr><tr><td>지방하천</td><td>월 60,000원</td><td>월 30,000원</td></tr></table>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지역등급	동 력 선	무동력선	국가하천	월 100,000원	월 50,000원	지방하천	월 60,000원	월 30,000원
지역등급	동 력 선	무동력선								
국가하천	월 100,000원	월 50,000원								
지방하천	월 60,000원	월 30,000원								
3.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하천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점용료등의 조정 산식(제5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0/1,00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0/1,00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0/1,0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0/1,0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0/1,0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25/100)

변상금 징수 통지서

대 상 자	① 성 명 (법인의 명칭)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⑤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							
위반 행위	재산의 표시			점유 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비고
	소재지	지목	지 적 (㎡)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위반행위 및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

귀하

## 관계법령

### 하 천 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하천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점용료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8.9.26 법률 제9133호]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개정 1994.12.2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94.12.22>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2007.12.21 법률 제8725호]

##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 (과태료 부과에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

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9. 2. 6

교육사회위원회

##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 19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 1. 20

다. 상 정 일 자 : 제17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9. 2. 6)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손성도)

### 1. 제안이유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정함(안 제6조).

다. 변상금의 사전 서면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 권태환)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또는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에 맞게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는 목적을,
- 안 제2조는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산정기준을,
- 안 제3조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 안 제4조는 점용료등의 연 4회 균등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는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점용료등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 안 제6조는 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 안 제7조는 변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는 허가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 안 제9조는 점용료등의 분할납부·조정·감면, 변상금의 부과, 허가 수수료에 관한 권한의 위임 규정을,
- 안 제10조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할 징수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 부칙으로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하천법」이 2008. 3. 21일 일부개정 되고 「하천법 시행령」이 2008. 4. 3일 전부개정 되어 2008. 4. 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점용료등 산정기준을 완화 또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반환, 변상금 등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임을 감안할 때 관계 전문가 및 시민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며,
- 「별표1」 제1호 “가” 및 “나”의 점용료의 경우는 과거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하천점용료를 개정된 하천법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점용료등이 일정부분 증가됨을 감안할 때 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조례안 제7조 관련 별지서식인 「변상금 징수 통지서」의 경우는 이를 통지 받은 시민이 이해가 쉽도록 담당부서 전화번호, 납입절차,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IV. 질의·답변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